현 황

- ❖ 최근 들어 신용카드 과다 사용의 여파,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 아직 경제규모, 인구 등 면에서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임

특 징

- ❖ 최근의 개인파산은 사업실패, 생활비 부족 등 주로 생계형 파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불황형' 개인파산이 우려되고 있음
- ❖ 취약한 가계 재무건전성 등을 보아 외부 충격의 흡수 여력이 매우 낮은 수준임
- ❖ 최근 한국은행은 국내 잠재파산 규모를 43만~112만 명 수준으로 추정함

일본 '불황형'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당사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생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나, 국가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

개인파산 최소화 과제

- ❖ 투기적 부동산 버블 확대를 가능한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 급락 방지
- ❖ 개인파산 신청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산신청에 신용교육이나 상담 등 일정한 조건을 강화
- ❖ 과거 재형저축과 같은 저소득층 상대 자산형성 상품 개발과 일자리 확충 등으로 잠재파산규모를 축소
- ❖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서둘러 제 기능을 상실한 서민 금융 시스템을 복원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
- ❖ 개인의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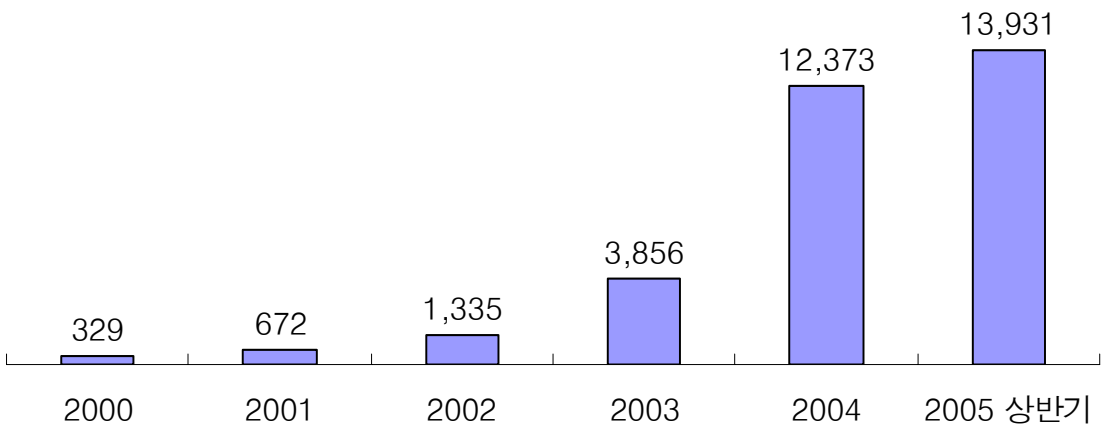
□ 우려되는 일본 '불황형' 개인 파산

1. 급증하는 개인파산 신청

○ **외환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국내 개인파산은 최근 들어 다양한 신용불량자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정부는 2004년 하반기 이후 배드뱅크제도, 개인채무회생제도 등 다양한 신용불량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신용불량자 수는 2004년 여름 400만명에 육박했으나 이후 정부의 다양한 대책으로 감소세를 보임
  - 2005년부터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있음
- **1995년까지 한 건도 없었던 국내 개인파산은 외환위기 직후 경제 및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함**
  - 국내 금융기관들이 대출시 관행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외환위기 직후 채무보증을 해준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단순한 보증피해와 심지어는 연대채무 불이행을 초래 (일례로 1998년 12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었던 11건의 면책결정사례를 보면 파산사유 중 남편이나 친구사업, 직장상사의 보증이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01년 이후 부터는 소비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과다 사용 등 과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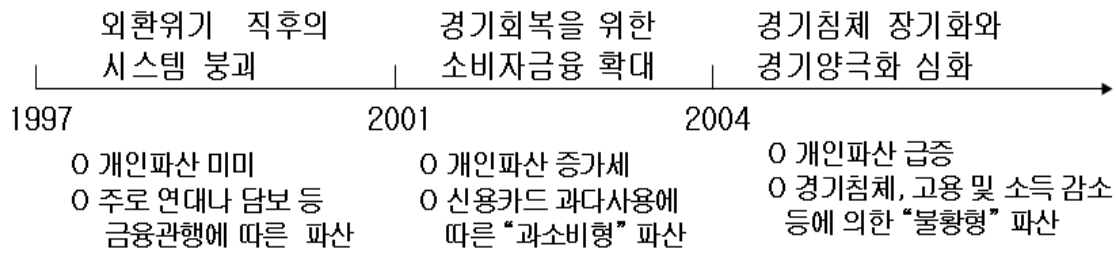
< 개인파산 신청건수 추이 >



자료 : 대법원.

- 특히 2004년 이후 신용카드 과다 사용의 여파,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가시화면서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
  - 2005년 상반기 동안의 파산신청 건수는 1만3,931건으로 2004년 전체건수(1만2,317건)를 넘어섰고, 연말까지는 2만5,000건이 넘어선 것으로 추정됨
  - 2004년 개인파산은 사업실패 45.4%, 생활비부족 15.5% 등 경기불황장기화의 여파에 따른 생계형 파산신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개인파산 이후 부채를 면책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게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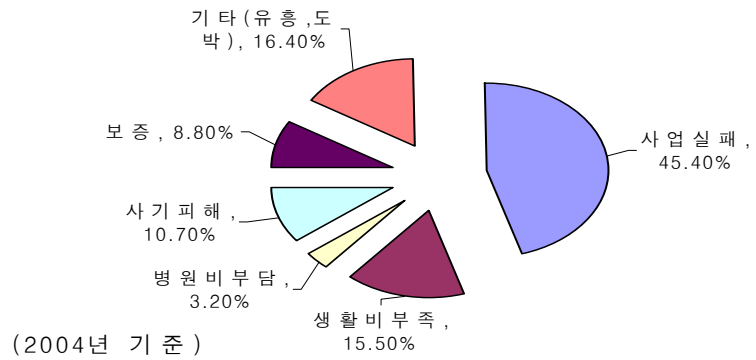
< 국내 개인파산 추이 >



○ 최근의 개인파산은 경기침체, 경기양극화 심화 등 경기불황에 따른 생계형 파산이 대부분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부동산버블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불황형' 개인파산이 우려되고 있음

< 개인파산 신청의 원인 >



자료 : 대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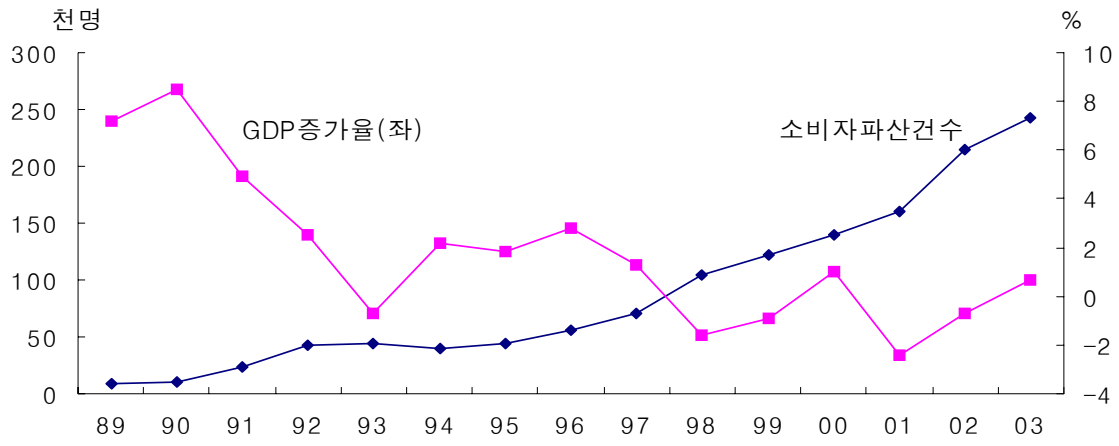
2. 점증하는 일본 '불황형' 개인파산 가능성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들어 부동산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개인파산이 급증함**

- **일본 GDP증가율이 1990년 7.2%를 정점으로 하락 반전한 가운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자 개인파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
  - 1990년 1.1만건이던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99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한 10.5만건을 기록
  - 부동산 버블기에 토지 구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한 개인들이 버블이 붕괴되자 구입한 부동산을 팔아도 부채액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으며, 결국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까지도 제대로 갚지 못하여 새로운 대금업관련론(소비자론, 카드론 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파산

- **일본의 개인파산은 기본적으로 부동산버블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에 기인하고 있어 '불황형' 파산으로 분류되고 있음[1)]**
  - 일본 개인파산의 원인은 약 8~90%가 대금업과 관련되었으며, 이외 수입감소로 인한 주택융자 상환불능, 연대보증 등이 차지

< 일본의 개인파산 추이 >



자료 : 일본 최고재판소

1) 이는 미국의 개인파산이 경기상승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금융의 발달로 인하여 과도한 카드 사용과 현금관리의 미숙 등에 기인한 '과소비형'으로 분류되는 것과 대비됨

○ 우리나라의 개인파산은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나, 최근의 빠른 증가세, 경기침체 장기화, 취약한 가계재무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일본 '불황형' 개인파산 가능성이 극히 우려되고 있음

- 경제나 인구규모를 감안할 경우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음
  · 2003년 기준 인구 10,000명당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미국 56, 일본 19, 영국 7, 한국은 0.8건임 (한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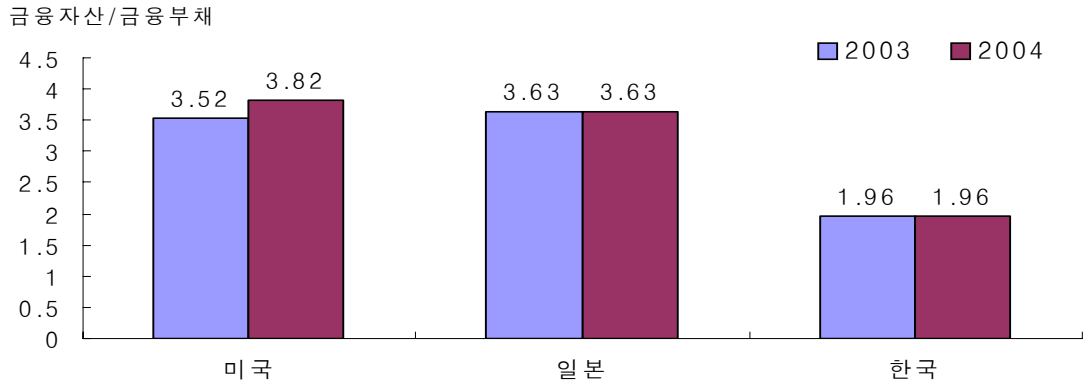
< 한국 대비 개인파산과 경제규모 국제 비교 >

	미국	일본	영국
GDP	18.1	7.1	3.0
일인당 GNI	3.0	2.7	2.4
부채/가처분소득	0.9	1.0	-
지급이자/가처분소득	0.7	0.5	-
개인파산신청건수	300	63	10

자료 : 한국은행 자료 재인용.
주 : 한국=1, 2003.

- 그러나 취약한 가계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충격이나 금리상승에 대한 충격 흡수여력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
  · 국내 가계의 자산구성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고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

< 개인부문 금융자산/부채 배율 국제 비교 >



자료 : 한국은행, 일본은행, 미 FRB

· 현재 가계의 재무구조를 보면 가계부채는 만기가 한정된 주택담보 대출 형식이며, 자산은 유동성이 극히 떨어지는 부동산이어서 유동성 면에서의 자산/부채의 불일치(mis-match) 현상에 노출되어 있음[2)]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한국은행이 신용불량자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잠재파산 규모를 약 43만명 ~ 112만명 정도로 추정함

· 가계 및 파산자 조사자료를 이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약 2~7%정도 (30~100만명)가 잠재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함

- 여기에다 향후 부동산버블이 연착륙하지 못할 경우 개인파산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부동산버블 붕괴는 실물자산이 매각되지 않는 상황을 유발하면서 가계부채 상환 문제 해결을 위해 가계들은 우선적으로 보유 금융자산을 매각할 것이나,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개인파산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개인파산은 그동안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더욱이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 개인파산에 대한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면서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국내 파산법은 기업 도산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의 파산 대처에 부적절했음

3. 개인파산 최소화를 위한 과제

○ 개인파산의 증가는 국가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가급적 사전에 개인파산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2) 한국의 개인금융 부채/자산 비율과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비율은 2000년 이후 급상승하면서 2004년 말 현재 외환위기 직전보다도 악화된 상황

- 개인파산 절차 종료후 면책(免責)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임[3)]

・파산자는 낭비나 과소비, 사기파산 등을 제외하고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공시법상의 불이익을 받음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파산되면 빚 탕감을 대가로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록되고 은행 계좌도 만들지 못하게 돼 사실상 사회적 경제적 사망선고를 받게 됨 (일종의 경제적인 '자살' 행위)

・미국의 파산법은 '새로운 출발(fresh starting)' 정책을 기본 모토로 면책에 대해 매우 관대

・비면책 주의로 출발한 일본이나 면책을 선의의 파산자에게 국한했던 우리나라에서도 개인파산자에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재생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국내 개인파산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면책을 위한 개인파산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 개인파산자를 조장하면서 신용사회 구축을 지연시키는 등 경제 전체가 멍드는 부작용 등 국가 경제적으로 커다란 비용이 수반됨

・한편 역으로 면책은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 등의 입장에서 보면 고스란히 부실을 안게 되는 셈임

○ 개인파산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책당국이나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요구되고 있음

3) 파산할 경우 파산에 의해 해산하고, 청산에 의해 해체되는 동시에 법인의 조직체가 소멸되는 법인파산과 달리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을 통하여 제기가 가능하며 대부분 본인 스스로 신청하는 자기파산임

- 정책당국은 추가적인 투기적 버블의 확대를 가능한 차단하여 향후 부동산가격 급락 현상을 피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부채 탕감) 면책에 앞서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를 전면 탕감하여 자력 갱생의 기회를 부여

· (도덕적해이 방지) 개인파산 신청의 주목적이 점차 채무면책인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산신청에 일정한 조건을 요구 (예컨대 신용상담기구 등에 일정 기간 교육이나 상담을 의무화 등)

· (잠재파산규모 축소) 저소득층을 상대로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늘려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

· (서민금융 시스템 보완)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재정 상태는 더욱 취약해짐에 대비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서둘러 서민금융시스템을 복원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

- 한편 개인들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웃도는 부동산을 과감히 처분하고, 불필요한 금융자산을 매각하는 등 개인의 재무구조를 개선시켜야 할 것임

· 가계의 경우 대출에 의존한 무리한 주택 구입을 억제하고 투기적인 재테크 보다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갖춰야 할 것임

· 저축, 신용 및 노후자산 관리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시킬 필요

박덕배 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